

# 구윤철 “30억 이하 주택 99%… 상위 1%만 과세 정상화”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라디오 대담서 세제개편 취지 설명  
실거주 중심 보유·거래세 부담 낮춰  
장기 거주 땀 양도 공제 최대 80%  
다주택 중과는 연차별 단계적 강화  
무주택 서민 펀셋 대출 지원 검토  
공급·금융 추가대책 발표도 예고

정부가 2026 세제개편안에 따라 부동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세대의 비중은 1%에 그친다는 입장을 내놔다. 시세 30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실거주할 시 보유세(종합 부동산세)는 물론, 거래세(양도소득세) 부담까지 줄어든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제(30억 원 이하 주택이) 99% 정도 된다. 상위 1%에 대해서만 과세를 정상화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강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사는(실제 거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 재경부 청사에서 ‘2026 세제개편안’에 대한 사전 언론설명회를 갖고 있다. /뉴시스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 원 이하의 세(종부세) 부담을 줄여 줬다”고 말했다. 또 “양도의 경우에도 30억 원 이하의 집에서 10년 이상 살 경우, 양도를 할 때 기본공제를 80%까지 받기 때문에 양도세가 줄어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처를 지난 5월9일 재개했다가 다시 유예했

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예가 아니다”라며 반론을 폈다.

그는 “지금 2주택자의 경우 20%포인트(p) 할증이 되고 3주택자는 30%가 할증된다”며 “(국민의견) 경청 과정에서 너무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니까 단계적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에 다주택자 중과가 2주택자

는 5%p(할증), 2028년에는 10%p, 2029년 이후 20%p로 현실화한 것이다. 3주택 이상자는 내년에 10%p, 2028년에는 15%p가 할증이 된다”고 했다. 유예가 아닌, 단계적으로 부담을 늘려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집주인이(비거주 시 세 부담 급증을 피하려고) 실거주를 하다 보면 전월세 매물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정부도 그런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전월세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청년들에 대해서는 소득 구분 없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65세 이상이 수도권 아파트를 팔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현대판 고려장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는 “경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르신이 지방에 가고 싶으니 좀 팔고 나가게 해 달라고 하셨다. 이것은 선택이다. 그런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리

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일부 지역에선 매물이 나오고 있느냐 돈 없어서 못 산다는 얘기도 있다. 대출을 좀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해(대출을) 완화해 줄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애로 해소를 위해 어떻게 펀셋 지원을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 대책과 금융 대책이(조만간)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주가 누르기 방지 장치’가 국회에서 비판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고민한 정책 지점이 있다. 시중에서 의견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토론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 논의과정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듣고 충분히 고민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SK하이닉스, 통합노조 출범 초읽기… 성과급 갈등 불붙었다

생산·기술사무직 아우르는 노조 추진  
준비모임 사흘 만에 3500명 이상 참여  
노조 설립신청서 제출에 내주 출범  
성과급 주식 지급·매도 제한안에 반발

반도체 초호황으로 역대급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에서 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아우르는 통합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내부 반발에 기존 노조에 대한 일부 구성원들의 불만까지 겹치면서 새로운 노조 설립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일부 구성원들은 최근 전임직(생산직)과 기술사무직을 포괄하는 통합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 만들어진 준비 모임에는 개설 사흘 만에 35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 전체 임직원 약 3만5000명의 10%에 해당하는 규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뉴시스

모다.

통합노조 측 임시위원장은 지난 8일 내부 공지를 통해 노조 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정식 노조가 출

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현재 복수노조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기술사무직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이천·청주공장 전임직 노조가 각각 별도로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진행한다. 새 노조를 추진하는 구성원들은 직군별로 나뉜 조직을 하나로 묶어 교섭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통합노조 설립 움직임에 불을 붙인 것은 성과급 문제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초과이익분배금(PS)의 재원을 영업이익의 10%로 정하고 기존 지급 상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해당 체계는 향후 10년간 유지하며 지급액의 80%는 해당 연도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나눠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올해 교섭 과정에서 회사가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고 일정 기간 매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

로 알려지면서 내부 반발이 커졌다. 회사가 적자를 기록할 경우 임금을 조정하는 내용도 협상 과정에서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성원들은 지난해 합의한 성과급 체계를 다시 협상 대상으로 삼은 데다 주가에 따라 보상 가치가 달라질 수 있고, 적자 시 임금 조정도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섭이 5차 본교섭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기존 노조에 대한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일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교섭 과정도 적극적으로 공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영업이익에 연동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고 나선 점도 변수다. 김경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달 중 성과급을 포함한 노사 교섭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다.

통합노조 측 임시위원장은 출범의 최우선 목표로 지난해 합의된 성과급 지급 약속의 이행을 내세우고 있다. 사측이 제안한 성과급 협상안을 철회하고 해당 사안을 향후 임단협 대상에서도 분리하겠다고 방침이다.

SK하이닉스 사측은 현재까지 통합노조 설립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사실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의거해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동조합과 진행 중인 올해 교섭은 현재와 동일하게 적법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휴가 끝난 산업계, 임단협 다시 격랑… 車·조선 ‘8월 분수령’

현대차 11일 쟁대위 추가 파업 논의  
기아·르노 쟁의권 확보 긴장 고조  
조선 빅3 임금·성과급 교섭 재개

국내 산업계가 여름휴가를 마치면서 멈춰 있던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도 일제히 재개된다.

현대자동차·기아 등 완성차 업계는 이미 부분파업과 쟁의권 확보로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조선업계 역시 임금과 성과급을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하다. 여기에 원·하청 교섭을 둘러싼 법적 분쟁까지 겹치면서 8월이 하반기 산업계 노사관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11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추가 파업 여부와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을 진행했으며, 생산 차질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임금과 성과급이다. 회사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과 성과급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상여금 800%,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 복직과 정년 연장 사전 합의, 상여금 인상 등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히 크다.

기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기아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2%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데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확대는 물론 주 4.5일제,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1년 이후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온 만큼 올해 실

제 파업 없이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르노코리아는 여름휴가를 앞두고 진행된 노조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되고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르노코리아 노조는 기본급 28만4595만원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호봉제 재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계도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된다.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는 휴가 기간 교섭을 중단하고 협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14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기본급과 성과급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선업 호황에 따른 ‘성과배분’이 주요 변수다. 노조는 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확대와 실적 개선을 근거로

보상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회사 측은 영향 변동성과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 관련 법적 분쟁도 향후 노사관계의 변수로 꼽힌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휴가 이후 사측의 추가 제시안과 노조의 파업 수위가 하반기 노사관계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며 “자동차와 조선 모두 실적 개선과 대외 불확실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생산 차질과 비용 부담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7월 임단협 갈등에서 시작된 노조의 부분파업으로 국내 생산량과 내수 판매량 모두 동반 감소했다. 현대차 7월 국내 생산량은 13만7449대로 전월보다 22%·전년 동월보다 0.4% 감소했다. 7월 국내 판매량도 4만8113대로 전



HD현대중공업 노조.

년 동월보다 14.4% 줄었다. 여름휴가 일정에 따라 7월 조업일수는 2025년보다 올해가 더 많았음에도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했다. 현대차 노조는 7월 13일부터 3주 연속 부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ysw@

